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대응

김관영 도지사, 중앙부처안 반영 위해 중기부·과기부·기재부 방문... 전북 중점사업 총력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세종을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전략사업을 최대한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 일환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세종에서 새만금개발,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창업생태계 구축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총 19개 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중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원) △해의 스타트업 유치(10억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 사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면담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원) △RF-ADME 구축확용 지원사업(30억원) 등 첨단 R&D 사업을 설명하며,



19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 관계자들에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예산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원) △국

립 모두에울플렉스 건립(5억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투자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이 바로 국비확

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 예산 편성 마감까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북의 주요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건강한 식생활 실천·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농식품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과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유아·아동·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하며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과 '제1차 전북먹거리종합계획(2024~2028)'에 맞춰, 사업 범

도, 식생활교육 지원·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등 추진

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임신부 대상 식생활교육을 새롭게 도입하고, 전문강사 50명을 양성하는 '식생활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 전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시군 단위로 확대해, 14개 시군의 실습공간 보유기관을 활용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농식품 소비정책 강

화사업'도 병행된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소비지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며, 안전·안심 농산물 소비 및 도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저탄소·친환경 등 2종 인증 교육에서 HACCP·지리적표시·전통식품·주류 품질 인증 등 총 14종 인증제도로 교육 및 홍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2,900여명의 도민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지역 농식품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접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063-272-4555)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은 한국부인회 전북지부(063-252-1747)로 문의하면 된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도민이 먹거리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과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전북선관위, 대선 관련 기관·단체에 당부

고용주가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27일부터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시작장애인 보유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등 담겨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물론,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작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전북 지역균형발전 선도

스마트 첨단산업도시 개발

신환경 주거안정도시건설

디지털 열린 소통 경영

전북개발공사